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400만 Y4-노믹스 선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40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위한 Y4-노믹스 선언'과 함께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이번 행정통합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을 일으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400만 통합특별시' 시대를 새로운 'Y4-노믹스' 비전으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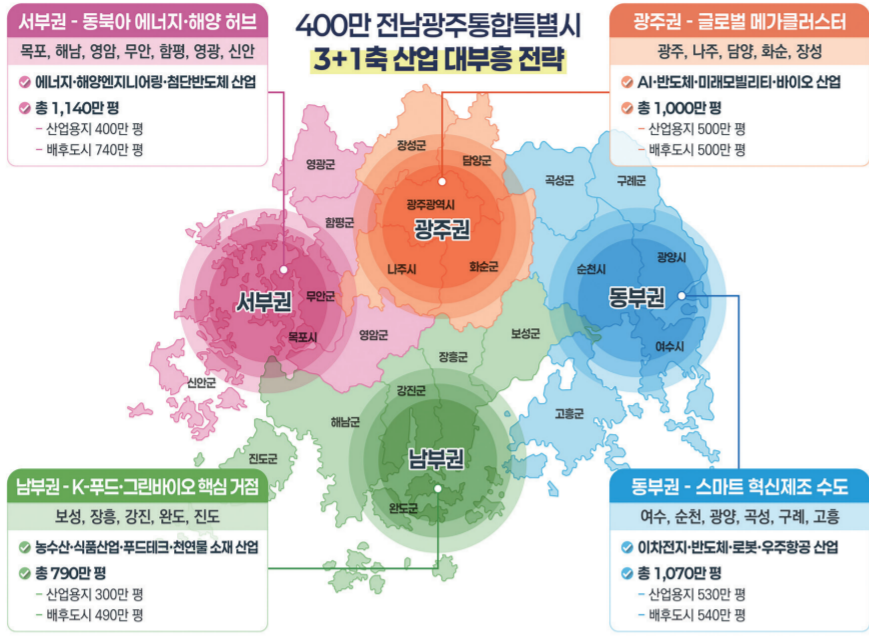
김 지사는 "Y4-노믹스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남·광주가 4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수직 성장축(Y-Core)이 되겠다는 국가 경제 전략이며 그 중심에는 Youth, 청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를 청년이 돌아와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좌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80만 인구 유입과 450조 투자 유치 목표를 도지사가 단장이 돼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을 즉시 가동하고 핵심기업 유치가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존 광주권·서부권·동부권 3축 권역에 새로 남부권을 포함시켜 '3+1축' 4대 권역으로 재편하겠다"며 "총 4천만 평 규모의 특화산업 단지 및 첨단산업 신도시를 조성해 400만 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권에는 산업용지 500만 평과 배후 도시 500만 평 등 총 1천만 평 부지에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 중심 글로벌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김 지사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와 AX 실증밸리, AI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해 AI 기술을 산업과 도시 환경에서 직접 검증하고 사업화할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부지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첨단 신도시를 설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헤드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

김 지사, "행정통합 핵심은 경제·80만 인구 유입·450조 투자유치"

"광주·서부·동부·남부 4대 권역 산업벨트 구축... 성장축 중심은 청년"



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장성 첨단산단에는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20만 평 규모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LG이노텍 등 연관 기업의 투자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 첨단의료기기 집적단지와 메디컬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광주·화순을 연계한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를 조성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초광역 의료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부권에는 산업용지 400만 평과 배후 도시 700만 평 등 총 1천100만 평 부지에 에너지·해양에너지·AI·방·첨단 반도체 중심의 동북아 에너지·해양 허브를 구축한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RE100 산업기지를 구축하겠다"며 "LG그룹의 전국 최초 해상풍력 설치량

을 조성하고 국내 최고의 앵커기업과 지자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해상풍력 전주기 공급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솔라시도에 국가AI컴퓨팅센터와 글로벌 AI데이터센터는 물론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 반도체 팹과 화합물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안국제공항을 반도체 항공물류의 관문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항공특화 MRO 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동부권에는 산업용지 500만 평과 배후 도시 500만 평 등 총 1천만 평 부지에 이차전지·반도체·로봇·우주항공 중심의 스마트 혁신제조 수도를 조성한다. 김 지사는 "피지컬 AI와 로봇생산 공장을 유치해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를 확대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반도체 핵심거점으로 키우겠다"며 "로봇용 반도체 팹을 유치하고 이차전지 핵심원료 산업을 육성

해 동부권을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과 스마트 제조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화학은 고부가 산업으로, 철강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저탄소 고부가까지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GS그룹과 함께 LNG 터미널과 수소배관망, 수소항만터미널 등을 갖춘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주기 수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흥에 제2우주센터를 유치하고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와 같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한편,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국방위성 전용발사장, 드론전투훈련센터까지 연계해 K-우주·방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권에는 산업용지 300만 평과 배후 도시 500만 평 등 총 800만 평 부지에 K-푸드·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을 구축한다. 김 지사는 "농수산·가공·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출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식품산업 모델을 구축해 친환경·저탄소 식품 생산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100대 식품기업 앵커 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구축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Y4-노믹스 '40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은 우리가 만들 전남·광주의 확정된 미래 청사진"이라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역사적 성공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100일간 '규제 제로' 발굴 추진

인공지능·모빌리티·에너지 등 전략산업 제도 개선 나서

광주시가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나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발굴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를 찾아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간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지역업체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경력단절자·고령층의 취업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돌봄과 복지제도 운영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는다. 규제 개선 제안은 발굴 기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나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062-613-2561, 2562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직능단체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규제발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가운데 중앙부처 소관 법령 등 개정 사항은 '규제신문고(sinmungo.go.kr)'를 통해 건의하고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한다. 지방규제는 시·자치구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관계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는 총 44건의 규제를 발굴해 지방규제 24건, 골목형성평가 공모사업 신청자격 기준 완화 등 지방규제 20건을 개선 과제로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재일 기자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광양 신규 환영

전남도, 200억 원 투입해 위기 기업·근로자 보호 총력

전라남도는 12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광양 신규 지정이 결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향후 6개월간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광양시 역시 철강산업이 중국의 공급 과잉과 미국·유럽의 고율관세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향후 1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광양 근로자와 기업은 각종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의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 →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1천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요건 면제) 등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7%→80%, 1인/1일 6만 8천 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이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에 발맞춰,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올해 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근로자 복지비와 신규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장을 지키는 일용직·상용직 근로자에게는 문화복지비, 채용기업 맞춤형 교육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종팔 기자

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대 연다

aT 운영 플랫폼제도권 편입... 2030년 거래액 7조원 목표

래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아래 aT가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의 온라인도매시장 모델이다.

aT는 2024년 개설 당시 거래 목표를 5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35% 넘는 6737억원의 거래 실적을 올렸

고 이어 지난해에는 목표였던 1조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aT는 부류별 MD(상품기획자)를 통한 거래 알선, 맞춤형 컨설팅과 팜투어를 통한 산지 직거래 확대, 출하 성수기 특화상품 개발, 카카오톡·롯데온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구매자 유치 등을 통해 거래 기반을 빠르게 넓혀왔다. 그 결과 거

래 참여업체 수는 2024년 3804곳에서 지난해 5272곳으로 39%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18억4000만원에서 32억6000만원으로 77% 늘었다. aT는 법 시행을 계기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 2030년까지 거래금액 7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품목 확대 등 시장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